

## 정치인들로부터 정치کم이 아닌 시민들로부터 정치کم으로서 가상의 사례분석

-‘반값급여’라는 정치메시지를 문자행위라는 정치کم을 통하여-

목원대학교 광고홍보언론학과 문운수

정치کم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대목은 정치메시지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하는 것이 판단되지 못하고 바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정치메시지의 진실성 혹은 정당성의 여부는 상관없이 정치인들은 그들의 메시지가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무사히 전달만 된다면, 더 나아가 설득된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적이었고 정의로운 정치کم을 이룩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치메시지의 선함이란 정치کم에서 다를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정치외교학, 등)이 이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치کم에서 까지 작동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있겠지만 이는 정치کم에 대한 학문적 회의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본다.

정치کم의 목적이란 정치적인 사안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치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더 나아가 설득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때론 수사학의 기술을 차용하는 이른바 정치아이디어 생성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불공정하거나 옳지 못한 정치 메시지는 아주 훌륭한 정치کم으로 인하여 잘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유권자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치도구로서 정치کم도 그 저항의 대상으로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정치کم은 정치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과 도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메시지와 같은 기호이어야 하고, 진정성파악의 수고를 더는 진실이어야 한다. 이는 적어도 정치라는 제도가 생겨난 이후 시민, 더 나아가 유권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정치کم에 대한 바램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시민들의 열망은 2000년 넘게 이룩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기호들만 선거철 제례시장에서 연출된다. 결국 정치ک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지나치게 정치인으로부터 도구적으로 전략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시민 혹은 유권자들의 정치کم은 정치کم의 대상으로서 공론장에도 입성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오직 투표라는 정치کم 기회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학자 ‘루만(Niklas Luhmann)’이 분류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후보자이자 정치인인 송신자에 해당하는 타자(Alter)도, 유권자이자 시민인 수신자에 해당하는 자아(ego)도 선별(selection)을 행하지만 수신자가 행하는 선별은 지나치게 미약하고, 다시 송신을 초기송신자에게 전달함도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정치کم에 있어서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치کم 상태는 매우 대등하지 못하다. 물론 많은 정치کم학자들은 다양한 정보사회라는 격변을 거친 현시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신기원이라고 할 정도로 진보된 매체상황은 유권자이자 시민이 정치کم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게 해 놓았다고 극찬한다. 그러나 이는 타자인 정치발신자가 내보내는 다양한 매체에서의 정치کم 분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타자로부터 가공된 정권의 정책, 정치인의 행보, 정당의 의견은 자아에게 매일 매시간 신속하게 개정되지만 그에 대한 반

응, 때론 자아에게서 출발한 정책, 정치인의 행보, 정당의 의견은 자아들끼리 온·오프라인에서 삼삼오오 모여 몇 마디의 한탄으로 끝나거나 정치인에게가 아니라 정치기관으로 흡수되어 사라지고 만다. 물론 그러한 공론을 타자가 종종 수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지극히 선택적이기 때문에 수용보다는 객관성·대의성·민주성을 드러내는 흔적만으로 기록된다. 결국 무한하게 정치컴의 경로가 개발되었다는 이른바 열린 정치컴은 수신창구의 이미지로서 구색일 뿐이지 자아이자 시민이며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확신이 없는 여전히 소리 없는 외침이 되는 것이다.

2017년 5월 현재 그런 답답함을 느낀 몇몇의 자아들은 매우 확실하게 타자들에게 정치메시지를 전달했다. 물론 공론의 장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래서 논란은 매우 컸다. 이른바 ‘문자폭탄’<sup>1)</sup>이라고 일컬어지는 유권자들의 커뮤니케이션행위는 자아들이 타자에게로 행한 매우 확실한 정치컴이었다. 그러나 이는 정치인의 지극히 사적인 통신수단을 마비시킬 정도로 가히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테러’라고 비판되기도 하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과업과는 상관없는 시간·상황에서의 문자행위와 비난내용은 결코 경시 될 수 없는 행위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민들의 정치컴의 현상을 가만히 전착해 보면 그간의 정치컴이 얼마나 대등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행위였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기실 온·오프라인으로 자아들이 타자들에게 향하는 정치컴은 지나치게 소요시간이 길었다. 그 도달도 확인될 수 없는 시도였다. 때론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메시지를 공론장에 입성시키고자 연대하여 거리시위를 계획하기도 했지만 그 조건준수와 준비작업은 생계와 정치행위가 분리되어 있는 자아들에게 그리 수월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치인 혹은 정당의 정치컴은 수시로 온라인으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전달했으며, 때론 온라인도 모자라서 통신문자는 물론이고, 보도주변에 불법현수막으로 까지 365일 24시간으로 시도한다.

정치인은 신비주의를 피하는 연예인이 아니다. 정치인은 시민과 확실하게 의사소통해야 하는 실존주의의 대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에게서 정치컴을 공론장만으로 제한하거나, 거창한 과정과 경로를 거친 정치컴만을 요구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정치컴을 행하겠다는 지난 20세기적 정치적 사고가 아닌가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의는 단 한 표만으로 자아들의 그간의 빈곤한 정치컴은 대폭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민들은 더 이상 공론장에 입성하지도 못하는 그들의 수많은 정치행위가 언젠가는 실현되기를 수 없이 목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정치컴이 온전하게 작동된다는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특정 정치인에 행하는 문자행위는 문자폭탄이 아니라 완벽하고 확실한 정치컴의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매우 손쉽기 때문에 정치컴의 본질로도 높이 평가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결국 문자행위라는 정치컴은 공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은 설득기교라는 우아한 정치컴을 학습한 필요도 없고, 수사학적 메시지선택의 정치컴모색도 불필요하며, 광고라는 정치컴의 포장시간도 아낄 수 있는 존재했지만 그간의 시민들이 깨닫지 못했던 블루오션으로서 정치컴인 것이다.

지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컴을 지나치게 성역화 했다는 것이다. 그 어떤 정부에서보다 지난 정부에서 수많은 자아들은 타자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그러나 그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치컴은 전략적인 것이라기보다 일상적인 것이고, 거창한 것이라기보다 간단한 것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길을 걸어가다가 개선해야 할 구정이 생각

---

1) 유권자 혹은 시민들이 특정 정치인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시점에서 매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일컫는데, 2017년 박근혜정권의 붕괴되고 새로운 정권의 들어서면서 과정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다.

났다면 간단하게 구청장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특정 정치인에게 쓴 소리를 해야 한다면 그 정치인에게 바로 바로 전달되어 신속한 성찰과 반영, 더 나아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정치کم은 오히려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방해 할 수 있는 정치کم환경일수도 있겠으나 정치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견보다 폭주하는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며, 이러한 정치کم이 21세기형 정치کم이 아닌가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의는 자아로서 시민의 문자행위 정치کم을 실질적으로 시행해 보고자 한다. 우선 현재의 한국정치인들이 시급하게 해결해할 사안은 경제문제이다. 이는 다른 말로 경제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불황을 경제의 정상화라 함은 지나치게 시장이 불공정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판단에서 이미 불황이 진행 중이라면 그 진행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 비롯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에게서 가장 큰 숙제란 경제의 정상화이다. 그런데 그 정상화에서 가장 체감 가능한 것은 바로 수입의 상대적 감소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물가가 오른 만큼 시민들인 수입은 제자리로서 이는 확실한 불황체감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황에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세비인상, 공무원들의 임금상승은 그리 반가운 통보는 아니었다. 물론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가운영비용의 상승은 시민으로서 이해할 만하고, 소방공무원처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복에게 조금 더 준다면 이도 시민으로서 참아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시도하는 정치کم에선 그 체감이 부재하며, 그 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이는 정치인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있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시민의 절실한 정치کم을 체감하지 못한 행보를 보였으며, 그러한 입법회의의 출결에도 자율성을 주장했으며, 심지어는 재산축적까지 이루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정치인들의 정치행보는 시민의 정치کم이 정치인들에게 확실하게 도달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한다.

결국 본 논의는 생계걱정이 시민과 같이 절실하지 못한 정치인들(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자치장 등)에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황, 경제의 비정상화를 바로 체감시키고 동참케 하기 위하여 '반값급여'라는 정치کم을 문자행위로 시도하고자 한다. 그에 대한 일련의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시민들의 시도하는 정치کم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선행논의를 살펴 본 논의의 차별화를 꾀할 것이다. 두 번째, 특정 정치인에게 문자행위라는 유권자이자 자아로서 시민들의 정치کم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위해 그 기준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민의 경제고통에 동참하고자 정치인의 '반값급여' 추진이라는 정치메시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방형 설문을 시민들에게 조사하고자한다. 네 번째, 반값급여의 요구가 세 번째의 조사에서 응답자들로부터 일정하게 동의된다면 주요한 정치인에게 그 메시지를 문자하고자 하며, 동시에 본 문자행위라는 시민들의 정치کم에 대한 의견도 그들로부터 수집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의 논의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